

연구논문

계층상승 전망과 재분배 선호: POUM 가설과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두희**

이 연구는 한국인의 계층이동 전망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같은 계층에 속하더라도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POUM(prospects of upward mobility) 가설의 한국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층과 계층상승 전망, 일반신뢰와 정부신뢰 변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뢰 변수를 제외한 모델의 경우, 하위계층은 미래의 계층상승 전망이 높아질수록 재분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POUM 가설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신뢰 변수를 포함한 분석 모델의 경우, 하위계층 및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 신뢰가 높은 경우에는 계층상승 전망이 높더라도 재분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의 경우는 오히려 계층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재분배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하위계층이 보수적 정책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는 계층이동 사다리에 대한 경제적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재분배 선호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는 정부기능과 동료 시민에 대한 믿음이나 판단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계층, 계층상승 전망, 재분배 선호, POUM 가설, 일반신뢰, 정부신뢰

* 이 연구는 이두희(2021)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조원(reo258@snu.ac.kr).

I. 서론

일찍이 경제학자인 멜처와 리차드(Meltzer & Richard 1981)는 경제적 불평등이 재분배 선호의 증가를 낳을 것으로 예측했다. 초기 계급투표를 연구한 정치학자들 또한 유권자는 본인의 계급정체성 또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가정하였다(Lipset et al. 1954). 하지만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지위와 일치하는 재분배 선호를 가지거나 그에 따른 투표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이전의 가정들에 의문이 제기됐다(Benabou & Ok 2001; Luttig 2013; Rehm 2016).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소득이나 직접지위가 낮은 하위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역시 그간의 선거에서 자신이 소속된 소득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급배반적 투표경향은 저소득층에서 주로 보고된다(강원택 2013; 문우진 2017).

불평등 구조하에서의 상대적 약자 집단이 재분배라는 개념 자체에 적대적이거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 왔다. 개인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중심으로 한 설명모델은 객관적인 소득 불평등과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Ravallion & Loshkin 2000). 개인은 현재 본인의 객관적인 소득수준에 따라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 상승과 그에 따른 계층 이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분배 선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본인의 현재 소득이 낮아도 재분배에 반대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경우에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고 명명되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강한 믿음이 객관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상쇄하여, 하위 계층의 재분배에 대한 보수적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Kluegel & Smith 2017).

이 연구는 사회적 이동성을 고려한 설명 중 베나부와 옥(Benabou & Ok 2001)의 POUM 가설(Prospects of Upward Mobility: POUM Hypothesis)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를 분석한다. POUM 가설은 유권자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이동성이 상방으로 열려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현재의 소득지위가 낮더라도 자신의 미래의 기대소득은 높기 때문에 미래의 높은 기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서 고율의 세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추측한다. 문화적 차이나 심리적 요인, 그리고 국가의 객관적 불평등 상황에 따라 상향이동 전망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Benabou & Ok 2001), POUM 가설은 다양한 국가의 경험연구에서 하위 계층의 낮은 재분배 선호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다(예컨대, Alesina & Giuliano 2011; Buscha 2012; Checchi & Filippin 2004; Engelhardt & Wagener 2014). 마찬가지로 국내에도 저소득층의 분배 선호도나 복지태도를 계층이동 전망과 연관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이미 존재한다(이재완 2017; 이지은·이재완 2015).

기존의 연구들이 POUM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해 왔지만, 이론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과의 복잡한 교호작용 속에서 POUM 가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적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은 재분배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변수들을 모델에서 배제하거나 통제변수로만 포함시켜 단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contextual) 변수인 정부신뢰 및 일반신뢰를 포함해서 POUM 가설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복지태도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문화적 동인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신뢰는 중요한 변수이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주체인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인 정부신뢰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Easton 1975). 또한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는 복지혜택에 대한 무임승차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재분배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nsen & Svendsen 2011). 즉, 일반신뢰의 경우 복지 수혜자의 정직성에 대한 기대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신뢰의 경우 복지 공급자인 정부가 얼마나 믿음직하냐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재분배 선호를 설명하는 이론적 맥락들 중에서 자기이해(self-interest)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학적 시각과 이타심(altruism)과 같은 개인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시하는 시각은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통합적 시도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의 가치(value)와 사회문화적 관점의 신념(belief)은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Benabou 2008),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 나아가 한국 사회의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는 모델의 재구성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계층과 계층이동 전망,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의 정부신뢰, 일반신뢰의 상

호작용이 한국인의 재분배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재분배 선호에 대한 영향요인 및 상관계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연구자료 및 자료와 변수의 처리 방법에 관해서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신뢰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정부신뢰 변수 등 조절변수의 처리 방법 및 여타 다른 변수들의 조작화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예비적 분석으로 실시한 계층에 따른 계층 상승 전망과 재분배 선호에 대한 POUM 가설의 일반적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으로는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계층별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신뢰수준에 따라 POUM 가설의 적용가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논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 및 제언을 전한다.

II. 선행연구와 연구질문

1. 정치경제학적 설명요인

재분배 선호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정치경제학적 설명과 정치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경제행위 주체의 합리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재분배 선호가 결정된다고 본다(Alesina & Giuliano 2011). 정치심리학적 접근은 주로 이념 또는 정당일체감, 당파성 등의 심리요인이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Scars et al 1980). 이러한 관점은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치적 선호, 그리고 경제적 행위자의 자기이해, 주로 소득에 기반을 둔 판단에 의해 재분배 선호가 결정된다는 정치학과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문화 또는 사회적 인식 등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비금전적이며 비정치적인 원인으로서 이타주의(altruism), 호혜성(reciprocity), 공정성(fairness)와 같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체계는 재분배 선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Fehr & Schmidt 2006).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초기에 개인의 현재소득이 재분배 선호를 결정한다는 비교

적 단순한 가정을 제시했다. 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즉 자기이해(self-interest)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경제학의 전통적 가정에서 비롯한다. 대표적으로 중위투표자 정리(median-vote theorem)는 유권자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정책 결정은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Meltzer & Richard 1981).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비교했을 때,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중위투표자는 재분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전통적인 계급투표이론이나 권력자원이론 또한 서구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소득이 낮은 노동계급일수록 본인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높은 재분배 선호를 가질 것이라는 관점이다(Korpi 1983; Lipset et al. 1954).

하지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소위 허쉬만의 터널효과(tunnel-effect)가 조망되면서 이러한 초창기 가정들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사람들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용인하는 태도를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2차선 터널을 지나다가 심각한 교통 체증에 빠진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왼쪽 차선에 있고 잠시 후 오른쪽 차선의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 나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지만, 곧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보다 훨씬 나아진 기분이 든다(Hirschman & Rothschild 1973).” 허쉬만의 2차선 터널에 대한 비유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분배 선호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첫째로,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에 의해서만 재분배 선호를 결정하지 않으며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개인의 상향이동에 대한 인식이 현재 가난한 사람들이 재분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쉬만의 아이디어는 그 후 재분배 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피케티의 ‘합리적 학습이론(rational-learning theory of redistributive politics)’과 베나부와 옥의 ‘계층상승 가능성 가설(Prospects of Upward Mobility: POUM Hypothesis)’에 각각 영향을 주었다. 합리적 학습이론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소득이 반영되며, 미래의 기대소득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미래 전망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Piketty 1995). 개인이 추정하는 미래의 기대소득은 합리적 학습자(rational learners)들이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기회구조와 개인의 역량 요인에 각기 다른 인지적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의 기회구조는 결정되어 있는 반면에 개인의 노력은 다

양한 개인적 동기(incentives)에 의해 좌우되므로, 계층이동 전망은 결정론적 요인인 사회의 기회구조와 의지적 요인인 개인의 역량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 어느 사회의 경제적 상황은 동시대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반영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재분배 선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POUM 가설 또한 재분배 선호는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에 주목하며, 미래의 기대소득에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계층상승 가능성을 핵심적 변수로 고려한다. 현재의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본인 또는 자녀가 중위소득(median income)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Benabou & Ok 2001). POUM 가설은 서구 유럽 국가들의 선례를 제외한 여러 국가들에서 왜 중위소득 이하의 유권자들 중 많은 수가 재분배에 대해 보수적인 정치태도를 견지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던 중위투표자 모델에 대해 수정된 설명을 제공한다. 위협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본인의 자산을 균등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므로, 사회의 신분이동이 활발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재분배를 덜 선호하게 된다.

POUM 가설에서 가정된 기대소득에 대한 전망은 사회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계층이동인식 내지는 주관적 지위변동가능성이라는 대리변수로 측정되며, 해당 변수를 사용한 각국의 실증연구들은 설문조사 및 실험조사 결과를 통해 POUM 가설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해 왔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재분배 선호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하나, 많은 연구들은 높은 상향이동 인식은 낮은 재분배 선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미국의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한 연구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반감을 야기한다고 분석한다(Alesina & La Ferrara 2005). 또한 자발적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조사에서도 위협회피 성향과 불평등회피 성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상향이동 가능성은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Checchi & Filippin 2004). 영국의 가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상향이동 인식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Buscha 2012).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한 비교연구는 계급투표의 역사가 뚜렷한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계층이동 가능성이 재분배 선호에 명확한 영향을 주는지 불명확하다고 보고되지만, 몇 가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유

의미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Jaime-Castillo & Marqués-Perales 2019).

반면 한국에서의 선행연구는 POUM 가설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왔다. 일부의 연구는 상향이동의 전망이 재분배 선호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 반면에, 다른 연구는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재분배 선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반대의 결과를 보고했다. 예컨대 이지은·이재완(2015)의 연구는 국내에서 계층상승 가능성과 재분배선호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인데, 여기서는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믿을수록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대한 선호가 줄어드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계층을 하층, 하상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계층상승 가능성과 계층 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최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는 모두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POUM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하솔잎·이우진(2016)의 연구는 복지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 문항별로 나누어서 추정한 결과, 오히려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재분배 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사회(저부담·저복지 사회-고부담·고복지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와 같은 세 개의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영향요인을 추적한 결과, 질문지의 단어 선택에 따라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일관되지 않게 변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회귀계수의 경우는 소득수준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재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종속변수인 재분배 선호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분배 이념 자체와, 실제로 세율을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하솔잎·이우진(2016)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되는 바인데, 미래소득 전망과 더불어 소득수준이나 교육연수 등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효과는 ‘고복지 사회’와 같은 이념형적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지은·이재완(2015)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선호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삼았음에도 계

층이동 전망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기에, 측정 문항이 구체적 정책을 포함하는 지 여부에 따라서도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는 셈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모델에 포함된 설명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거나 독립변수와 공변인 간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개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통제변수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면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variable bias)가 발생하거나,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의 효과가 계층이동 전망의 효과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모델의 타당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종속변수가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호 내지는 태도를 묻는 경우, 이론적 모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현실에서의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이 조사대상의 응답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화용·안도경·박원호 2015). POUM 가설에서 합리적 유권자는 철저히 자기이해에 기반을 둔 미래소득의 계산을 통해 정책선호를 결정하지만, 현실의 유권자의 정책 선호는 그 사회의 다양한 맥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모델이 설정되면 실증적 설명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심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모델에서 다룬 맥락적 요인으로서의 신뢰에 대해 논의한다.

2. 정치심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개인의 정책선호와 관련하여 정치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의 수준이 유권자의 복지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정치적 신뢰란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정향(Hetherington 1998)’이며, 구체적으로는 ‘대중의 규범적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 청사 및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자 개인들의 평가(Miller & Listhaug 1990)’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투입(input) 및 산출(output)의 제반 과정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의 투입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은, 에들룬드의 정리에 따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신뢰가 간섭 요인(intervening factor)으로 작용한다고 본다(Edlund 1999). 첫째로, 국가중심적 시각에서는 위에서부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데, 국가와 정부기관들은 서로 다른 이익집단들 간의 이익 협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권

자의 가치관과 정치적 선호를 구조화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둘째로, 행위자중심적 시각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특정 사회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균열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제도적 기관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태도와 선호로 조직화된다고 본다.

정책의 산출 측면에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부의 집행력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정책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낮은 정부신뢰는 정부의 조세 시스템과 집행력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다(양종민 2020). 마찬가지로 일부 유권자들이 재분배 자체에는 이념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재분배 정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강정희·염동문 2014; 이현우 2013).

요컨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책 공급자로서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연계된다(Jensen & Svendsen 2011). 정부신뢰는 투입 측면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가 유권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제대로 대표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써 복지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 실행의 주체인 행정기관이 조세 시스템과 복지 서비스를 올바르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복지정책 선호와 관계가 있다.

개인의 문화적 특성에 중점을 둔 시각에서는, 타인의 정직성 또는 호혜성을 전제하는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가 정책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한 판단이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신뢰는 ‘타자의 선심(善心), 정직성, 호혜성과 같은 인격특성을 전제하는 시민들에 대한 평가나 태도’이다(Newton 2001). 이는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정보가 없다고 가정할 동료 시민에 대한 일반적 믿음의 정도로 측정된다(Yamagishi & Yamagishi 1994).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는, 정책의 세입과 세출 과정에서 동료 시민의 기회주의적인 도덕적 해이나 부정적 무임승차에 의해 정책효과성이 훼손될 것인지에 대한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이 복지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재분배 정책을 위한 세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시민들이 탈세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한다고 염려하거나, 복지재원이 근로소득을 숨기는 사람 내지는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등 부적절하게 복지수혜를 받고자 하는 무임승

차자에 의해 낭비된다고 생각할 경우,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즉,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의 사회적 부담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분배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Daniele & Geys 2015)’ 한다. 시민들은 공공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동료 시민이 협력적이고 호혜적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인 수준에서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따라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신뢰와 복지정책 선호의 관계는 주로 2010년대 이후 최근의 연구에서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버그와 비외른스코프는 2000년대 이후 프리덤하우스의 자료를 사용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높은 대인 신뢰 수준은 해당 국가들에서 큰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핵심적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Bergh & Bjørnskov 2011). 이러한 주장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다른 몇몇 연구들도 일반신뢰와 복지정책 또는 재분배정책 선호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다. 예컨대 나가요시와 사토는 일본의 사례에서, 높은 일반신뢰는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의한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한다(Nagayoshi & Sato 2014).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분배 정책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반한다고 생각하므로 해당 정책에 적대적이지만, 일반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 그러한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1개의 EU 가입국을 분석한 비교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높은 일반신뢰 수준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고, 높은 세율의 세율에 찬성하는 정책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제시된다(Charron et al. 2021).

요약하면, 정부신뢰와 일반신뢰는 한 사회의 제도와 구성원으로부터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잘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써 개인의 정책 선호를 조절할 수 있다. 정부신뢰는 정책공급자인 정부가 정책의 투입-결정과 산출-실행의 측면에서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다. 일반신뢰는 정책수혜자인 시민이 세원 확보와 세출 단계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연관된다. POUM 가설에서는 행위자의 자기이해적 동기에 따라 재분배 정책 선호가 결정된다고 보지만, 현실의 유권자는 그가 속한 사회의 맥락적 경험에 비추어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복합적 판단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허쉬만과 피케티에게 돌아가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경험이 종합적으로 정책 선호를 결정한다는 설명과도 부분적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재분배 선호는 자기이해적 동기의 타당성과 정책실현의 신뢰성 간의 상

호작용 함수라고 가정하면, 기존의 POUM 가설은 각각 정부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준에 따라 재분배 선호에 일관된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첫째,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은 무엇인가? 상기한 요인들 외에도, 정치심리학적 설명변수로 이념성향(김윤태 외 2013; 신현중 외 2019; 최창용·최슬기 2018)과 당파성(Boix 2003)과 같은 변인들이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념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본인의 당파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정당이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높아진다고 설명된다. 또한 문화적 요인으로서 이타주의(Rueda 2018), 개인주의와 집단주의(Brooks & Manza 2006), 국민적 정체성(Shayo 2009), 공정성 인식(Alesina & Angeletos 2005; 강명세 2019) 등이 재분배 선호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된다. 풍부한 설명을 위해서 본 연구의 핵심적 변수들과 더불어 이러한 변수들 중 재분배 선호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정치경제학적 설명에서는 객관적인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이 재분배 선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연구는 POUM 가설에 따라 현재소득을 반영한 주관적 계층별로 미래소득이 반영된 계층이동 전망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정치심리학적, 문화적 요인으로써 정부신뢰 및 일반신뢰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POUM 가설의 설명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 탐색한다.

연구질문 1.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2. POUM 가설에 따른 계층 간의 재분배 선호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정치경제적 변수(계층이동 전망), 정치심리적 변수(정부신뢰), 문화적 변수(일반신뢰)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다음으로 <연구질문 2>의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예측하는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먼저 신뢰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재분배 정책이 미래의 자기이해에 손해가 될 것이라 생각할 것이므로, 사적 이해에 근거하여 낮은 재분배 선호를 보일 것이다. 반면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즉 정책의 투입-결정 및 산출-실행 과정에서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수혜자인 시민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공공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

이다. 이 경우 사적 이해뿐만 아니라 공적 이해에 대한 판단이 재분배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정부신뢰와 일반신뢰 수준이 높으면, POUM 가설에 근거한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과 재분배 선호의 부정적(negative)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조절효과는 상향이동 가능성의 영향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층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가설 1. 하층의 경우, 동일한 주관적 계층에 속하더라도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견지할수록 낮은 재분배 선호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2. 하층의 경우, 정부신뢰와 일반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계층상승 가능성과 재분배 선호의 부정적 관계가 약해질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KSIS: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를 활용하였다. 행정연구원은 2012년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부터 두 조사를 통합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매년 조사 및 공표하고 있다. 본 설문자료는 2019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 사이 국내 거주중인 만 19~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표본의 수는 총 8,000명이다. 표본추출단위는 1차적으로 각 시·도 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며,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내의 가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 내 조사대상 개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인 다단계층화확률비례 추출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표본추출틀은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로 설정되어 있다.

분석방법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항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POUM 가설에 따라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전망의 효과가 상층, 중층, 하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과 계층이동 전망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예비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계층별로 계층이동 전망과 일반신뢰,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와 재분배 선호를 각기 확인하여 서로 다른 이론적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본 분석을 제시했다. 또한 각각의 모델에서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주요 변인들을 통제하면서 이들이 재분배 선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폈다. 조절변수인 신뢰는 정부신뢰의 경우 기관신뢰에 대한 17개의 문항에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사용하여 요인변수를 추출하였고, 일반신뢰의 경우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변수를 이용하였다.

2. 변수의 조작화

종속변수인 재분배 선호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항에서 0점~10점 사이의 11점 척도로 된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원 문항은 재분배에 반대하는 경우 0점에 가깝게, 재분배를 선호하는 경우 10점에 가깝게 응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 변수에 대한 추가적 코딩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상술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치경제적 변수, 정치심리적 변수, 문화적 변수와 사회인구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먼저 정치경제적 변수에서 계층의 경우 본인의 지위를 매우 낮다(0점)부터 매우 높다(10점)으로 11점 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계층을 사용하였다. 0점~3점을 하층으로, 4점~6점을 중산층으로, 7점~10점을 상층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소득, 직업지위, 학력수준 등으로 측정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아닌 주관적 계층의식을 주된 계층 변수로 사용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주관적 계층의식은 객관적 경제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생활양식과 사물에 대한 생각, 가족적 배경과 같은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을 동시에 인지함으로써 파악되기 때문이다(Jackman & Jackman 2020). 계층에 대한 주관적이고 문화적 인식은 직업, 소득, 학력 등 객관적 경제조건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준거 집단에 대한 관계적 인식을 포함한다. 객관적 계층은 연구자에 의해 기계적으로 부여되지만, 주관적 계층은 개인이 인지한 준거 집단과의 심리적 거리감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렇게 관계적으로 형성된 계급 정체성은 정책 선호에 있어 객관적 경제수준보다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계급 정체성이 하층과 가까운지 상층과 가까운지에 따라 그 사회가 재분배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결정된다고

설명된다(Lupu & Pontusson 2011). 한국에서도 2010년 이후 선거에서 소득, 직업과 같은 객관적 계층 변수보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계층 귀속 의식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더 잘 예측한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다(예컨대, 장승진 2013; 서복경·한영빈 2014).

둘째로, 대부분의 국내 설문조사에서 측정되는 소득, 직업, 학력 수준으로는 개인의 객관적인 계층 위치를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다. 먼저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이나 월수입을 측정하는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가변적이므로 개인의 객관적 계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자산은 소득보다 계층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되지만, 사회조사에서 자산을 정확히 측정하는 조사는 매우 드물다. 직업의 경우도 직업계층분류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려면 상세한 직업분류 변수가 필요한데, 이 역시도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학력의 효과 또한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 간 실질적인 교육수준의 편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주관적 계층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주관적 계층의식을 선택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된 계층을 중심으로 분석한 모형을 부록 <표 9>에 첨부하였다. 객관적 계층으로 추정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의 종류와 회귀계수의 방향은 주관적 계층의식을 활용한 본 분석과 전반적으로 동일하였다.

계층이동 전망은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이동 가능성 변수를 활용했다. “실제 계층이동 여부가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적 평가(김동훈·하상웅 2020)”이며, 사회이동성 인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변수인 “객관적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변수와는 다르다. 후자의 경우 주로 부모 세대에 비해서 본인이 얼마나 객관적 계층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다. 두 변수는 모두 POUM 가설을 검증하는 실증연구에서 계층이동 전망을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료가 제공하는 전자의 변수를 사용했다. 해당 변수는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된 문항을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치심리적 변수 중 이념성향은 ‘매우 진보- 다소 진보- 중도- 다소 보수- 매우 보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정치학 연구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보수를 5점으로, 진보를 1점으로 코딩하였다. 정부신뢰는 17개의 기관신뢰 변수에 대해서 탐

색적 주요인분석(explanatory principal factor analysis) 결과 추출된 요인을 사용하였다. 기관신뢰를 측정하는 사회조사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각종 기관에 대한 문항으로 세부화하는데, 이러한 문항 묶음에서 정부신뢰를 하나의 차원으로 분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요인분석이다(예컨대, Lipset & Schneider 1987; Inglehart 1999; Norris 2000).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신뢰를 행정부 내지는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단일 기관신뢰 변수로 조작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는 제반 국가기관들의 신뢰가 정책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므로 단일 문항을 사용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변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에 사용된 원 변수는 한국의 주요 국가 및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4점 척도로 묻는 17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중 요인적재치가 낮은 3개의 기관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추출된 두 개의 요인에는 총 14개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사용됐다. 공분산행렬이 항등행렬과 일치한다는 영가설(null hypothesis)을 검정하기 위한 바틀렛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결과, χ^2 값은 45678.62로 99.99%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추출된 두 개의 요인 중 '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을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부록의 <표 7>,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적 변인은 선행연구에 따라서 공정성 인식과 국민 정체성, 일반신뢰를 포함시켰다. 공정성 인식의 경우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혀 공정하지 않다(1점)’-‘매우 공정하다(4점)’으로 측정된 연속변수를 사용했다. 국민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에 대한 4점 척도의 국가 자긍심 문항을 활용하였다. 일반신뢰는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된 4점 척도의 연속변수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적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가구소득, 교육수준, 경제상황 만족도, 고용상태가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변수로, 결혼 여부는 미혼과 기혼의 이분변수로 사용했다. 연령의 경우, 해당 자료는 가중치 산정 시 사후층화 보정 과정에서 시·도별, 성별, 연령대의 구성비를 보정하는데, 이때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편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령대가 아닌 세분화된 변수로 집계할 경우 분석결과가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은 연속변수가 아닌 연령구간 변수로 제공된다. 총 다섯 개의 연령구간은 만 나이로 각각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9세’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소득은 ‘100만 원 이하’부터 ‘6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의 7개의 범주를 가진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교육수준은 원 조사에서는 ‘초졸 이하-중졸-고졸-대졸 이상’ 네 범주로 측정되었으나, 초졸 이하 및 중졸의 누적분포가 매우 적어(9.6%) 초졸 및 중졸 이하를 하나의 범주로 합하여 총 세 개의 범주를 지닌 명목변수로 취급하였다.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은 부록 <표 9>에 포함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제상황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의 11점 척도의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고용상태는 ‘비고용’,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다섯 개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주요 변인들의 분포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사례 수	평균 (비율)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재분배 선호	8,000	5.56	2.03	0	10
	주관적 계층	8,000				
	하층	932	11.7%			
정치경제적 설명요인	중층	5,385	67.3%			
	상층	1,683	21.0%			
	계층이동 전망	8,000	2.56	0.72	1	4
정치심리적 설명요인	이념성향	8,000	2.95	0.86	1	5
	정부신뢰	8,000	0	1	-2.98	3.59
문화적 설명요인	공정성 인식	8,000	2.19	0.69	1	4
	국민 정체성	8,000	2.93	0.63	1	4
	일반신뢰	8,000	2.69	0.59	1	4

사회인구 변인	성별	8,000				
	남	4,011	49.9%			
	여	3,989	50.1%			
	연령	8,000				
	19~29세	1,542	19.2%			
	30대	1,516	19.0%			
	40대	1,769	22.1%			
	50대	1,821	22.8%			
	60대	1,352	16.9%			
	결혼 상태	8,000				
	기혼	2,624	32.8%			
	미혼	5,376	67.2%			
	가구소득	8,000				
	100만 원 미만	363	4.6%			
	100~200만 원 미만	603	7.6%			
	200~300만 원 미만	1,043	13.0%			
	300~400만 원 미만	1,426	17.8%			
	400~500만 원 미만	1,483	18.5%			
	500~600만 원 미만	1,369	17.1%			
	600만 원 이상	1,713	21.4%			
	교육수준	8,000				
	중졸 이하	770	9.6%			
	고졸	3,235	40.5%			
	대졸 이상	3,995	49.9%			
	경제상황 만족도	8,000	4.01	1.95	0	10
	고용상태	8,000				
	비고용	2,189	27.4%			
	상용직	3,330	41.6%			
	임시/일용직	673	8.4%			
	자영업	1,553	19.4%			
무급가족종사	255	3.19%				

<표 2> 주요 변인의 분포: 계층별 신뢰

조절변인	계층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Q1	Q2	Q3
일반신뢰	하층	932	2.48	0.65	2	3	3
	중층	5,385	2.69	0.58	2	3	3
	상층	1,683	2.83	0.55	3	3	3
정부신뢰	하층	932	-0.18	0.91	-0.80	-0.16	0.41
	중층	5,385	0.03	1.00	-0.60	0.07	0.77
	상층	1,683	0.01	1.02	-0.67	0.06	0.75

IV 분석결과

1. 예비적 분석 : POUM 가설의 설명력과 계층별 선호

이 장은 한국인의 계층별 재분배 선호를 설명함에 있어 POUM 가설의 적합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층이동 전망이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된다. 계층이동 전망이 높아지면 재분배 선호는 감소한다는 POUM 가설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이재완 2017), 이와 반대로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하솔잎·이우진 2016). 또한 국제 비교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객관적인 사회이동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있는지에 따라서 POUM 가설의 적용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흔히 보고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 앞서 계층별로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예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성된 계층과 계층이동 전망의 상호작용항과 기초 사회인구적 변인들을 포함한 OLS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계층이동 전망이 높아질수록 재분배 선호가 감소하는 부(negative)적 상관관계는 하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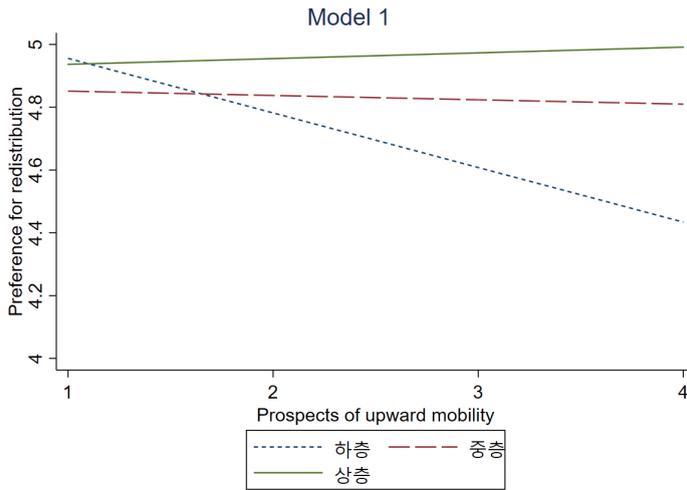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중층과 상층에 속한 사람들은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의 기준 집단(reference group)인 하층의 경우, 계층이동 전망의 회귀계수는 -0.174로 9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층과 상층의 경우 계층이동 전망의 회귀계수는 양수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0.1의 관측된 유의수준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된다. 즉, 중층과 상층의 경우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된다.

<표 3> 계층별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N=8,000$)

			Model 0		Model 1	
			<i>Coef</i>	<i>SE</i>	<i>Coef</i>	<i>SE</i>
정치 경제적 요인	계층(하층)	중층	0.091	0.066	-0.265	0.210
		상층	0.236**	0.077	-0.211	0.256
	계층이동 전망		-0.027	0.029	-0.174*	0.081
	계층×계층이동 전망	중층			0.160 ⁺	0.089
		상층			0.192 ⁺	0.101
통제변수	연령(19-29세)	30대	-0.006	0.074	-0.006	0.074
		40대	0.017	0.076	0.020	0.077
		50대	0.048	0.077	0.051	0.077
		60-69세	-0.063	0.082	-0.061	0.082
	성별(남)		0.039	0.044	0.038	0.044
	결혼 여부(기혼)		0.068	0.550	0.065	0.055
	이념성향		-0.337***	0.245	-0.338***	0.025
	고용상태(비고용)	상용직	0.123*	0.054	0.121*	0.054
		임시일용	0.259	0.081	0.021	0.081
		자영업	-0.108 ⁺	0.065	-0.109 ⁺	0.065
무급가족		-0.241*	0.121	-0.237 ⁺	0.122	
R^2			0.0324		0.0329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결과는 소득이 낮은 한국인들 중에서 왜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계급 배반적 선호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POUM 가설의 설명력을 확인하는 경험적 근거가 된다. 동일한 주관적 계층성을 보유할지라도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견지할수록, 고세율의 재분배 정책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해석은 행위자의 자기이해의 측면에서 적합하나, 재분배 선호에 대한 설명요인은 다양하기에 상기한 분석이 계층별 재분배 선호에 대한 충분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림 1>에 표현된 계층별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 패턴을 염두에 두고, 본 분석에서는 심리적이며 문화적 요인들과 더불어 신뢰와 계층이동 전망 간의 조절효과를 계층별로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1> 계층별 재분배 선호의 패턴

2. 상호작용 분석: 신뢰와 계층이동 전망의 효과

다음으로는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치경제적 설명요인, 정치심리적 설명요인, 문화적 설명요인, 사회인구적 변인 및 계층이동 전망과 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조절효과 모형을 각 계층별로 확인하였다. 예비적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 POUM 가설의 적합성은 계층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계층별 효과가 정치심리적 설

명요인 및 문화적 설명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표 4>, <표 5>, <표 6>은 하층, 중층,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들의 회귀계수와 유의성을 각각 보고한 것이다. 분석결과, 계층별로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함의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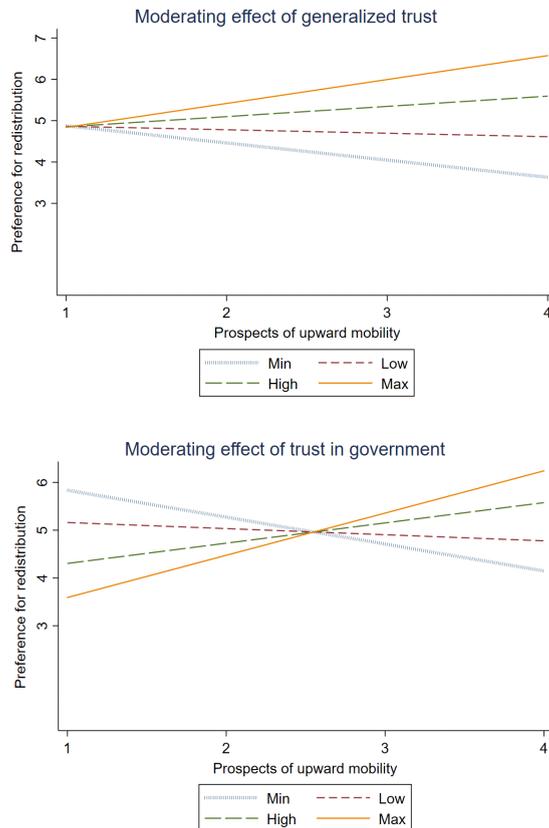
<표 4>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재분배 선호의 결정모형: 하층($N=932$)

		Model 2		Model 3		
		<i>Coef</i>	<i>SE</i>	<i>Coef</i>	<i>SE</i>	
정치경제적 요인	계층이동 전망	-0.740 ⁺	0.388	0.085	0.109	
	이념성향	-0.367 ^{***}	0.087	-0.362 ^{***}	0.087	
정치심리적 요인	정부신뢰	-0.312	0.344	-0.576 [*]	0.259	
	공정성 인식	-0.105	0.117	-0.137	0.118	
문화적 요인	국민 정체성	0.227 [*]	0.110	0.202 ⁺	0.109	
	일반신뢰	-0.312	0.344	0.395 ^{**}	0.118	
상호작용항	계층이동 전망×일반신뢰	0.326 [*]	0.150			
	계층이동 전망×정부신뢰			0.220 [*]	0.107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19-29세)	30대	-0.160	0.270	-0.162	0.270
		40대	-0.018	0.267	-0.032	0.268
		50대	-0.086	0.268	-0.072	0.269
		60-69세	-0.410	0.261	-0.416	0.261
	성별(남)	0.371 [*]	0.154	0.377 [*]	0.154	
	결혼 여부(기혼)	0.381 [*]	0.175	0.407 [*]	0.175	
	경제상황 만족도	0.120 ^{**}	0.043	0.128 ^{**}	0.043	
	고용상태 (비고용)	상용직	-0.330 ⁺	0.198	-0.340 ⁺	0.198
임시일용직		0.308	0.229	0.304	0.230	
자영업		-0.168	0.224	-0.186	0.224	
무급가족종사		-0.202	0.400	-0.204	0.400	
R^2		0.090		0.090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예비적 분석 단계에서 하층은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표 4>에서 하층의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들의 회귀계수를 보고한다. 하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는 이념성향, 성별, 결혼 여부, 경제상황 만족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이념성향은 보수적일수록 재분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재분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또한 재분배 선호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계층이동 전망과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의 상호작용 효과는 하층의 두 모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뢰의 조절효과가 포함된 모델에서는 계층이동 전망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조절효과는 <그림 2>에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일반신뢰(상)와 정부신뢰(하)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형예측값(하층)

그래프를 살펴보면, 각각 일반신뢰 수준과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계층이동 전망의 회귀계수 β 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신뢰의 조절효과의 경우, 일반신뢰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계층이동 전망의 회귀계수는 원래 음의 값에서 0.326씩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신뢰가 1씩 증가하면 계층이동 전망의 회귀계수 β 는 0.220씩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두 그래프 모두에서 재분배 선호와 계층이동 전망의 부정(negative) 상관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가 확보되면 정적(positive) 상관관계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효과의 선형결합 검정(linear combination test) 결과를 분석하면, 일반신뢰의 경우 평균보다 1 표준편차(SD) 정도 높은 신뢰도를 기록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변한다. 정부신뢰의 경우는 평균보다 약 1.1 SD 정도 높은 신뢰도를 보일 때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적 인식이 재분배 선호에 다른 요인들과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상호작용항과 서로 다른 이론적 영역의 공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예비적 분석 단계인 모델 1에서 하층의 부정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모델 2와 모델 3에서는 계층이동 전망의 일반적 유의성은 사라지며 대신 신뢰수준이 평균보다 약 1 SD 낮은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즉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의 수혜자인 동료 시민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일 때, 재분배는 사회적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소득전망에 따른 자기이해에 근거한 정책선호를 보이며, 이런 결과는 POUM 가설의 이론적 설명과 일치한다. 반면 신뢰수준이 높은 경우, 즉 재분배 정책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거나, 동료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를 산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 때, 개인의 1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외에 사회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선호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점은 신뢰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하층에 있어서 부정 상관관계가 사라지거나, 또는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는 패턴에서 확인되

는데, 이는 POUM 가설의 이론적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낮은 재분배 선호도는 자기이해에 의한 의사판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직성과 호혜성에 대한 믿음과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재분배 선호의 결정모형: 중층(N=5,385)

		Model 4		Model 5		
		<i>Coef</i>	<i>SE</i>	<i>Coef</i>	<i>SE</i>	
정치경제적 요인	계층이동 전망	-0.358*	0.173	-0.095*	0.039	
	이념성향	-0.178***	0.032	-0.179	0.032	
정치심리적 요인	정부신뢰	-0.046 ⁺	0.027	-0.267**	0.095	
	공정성 인식	0.009	0.040	0.003	0.040	
문화적 요인	국민 정체성	0.459***	0.044	0.461***	0.044	
	일반신뢰	0.039	0.163	0.283***	0.045	
상호작용항	계층이동 전망×일반신뢰	0.098	0.063			
	계층이동 전망×정부신뢰			0.086*	0.035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19-29세)	30대	-0.242*	0.093	-0.243**	0.093
		40대	-0.062	0.096	-0.060	0.096
		50대	-0.115	0.097	-0.115	0.097
		60-69세	-0.352**	0.105	-0.357***	0.105
	성별(남)	0.229***	0.055	0.228***	0.055	
	결혼 여부(기혼)	0.136*	0.069	0.137*	0.069	
	경제상황 만족도	0.163***	0.015	0.164***	0.015	
고용상태 (비고용)	상용직	-0.059	0.068	-0.059	0.068	
	임시일용직	-0.126	0.103	-0.128	0.103	
	자영업	-0.010	0.081	-0.009	0.081	
	무급가족종사	-0.309*	0.154	-0.300 ⁺	0.154	
<i>R</i> ²		0.083		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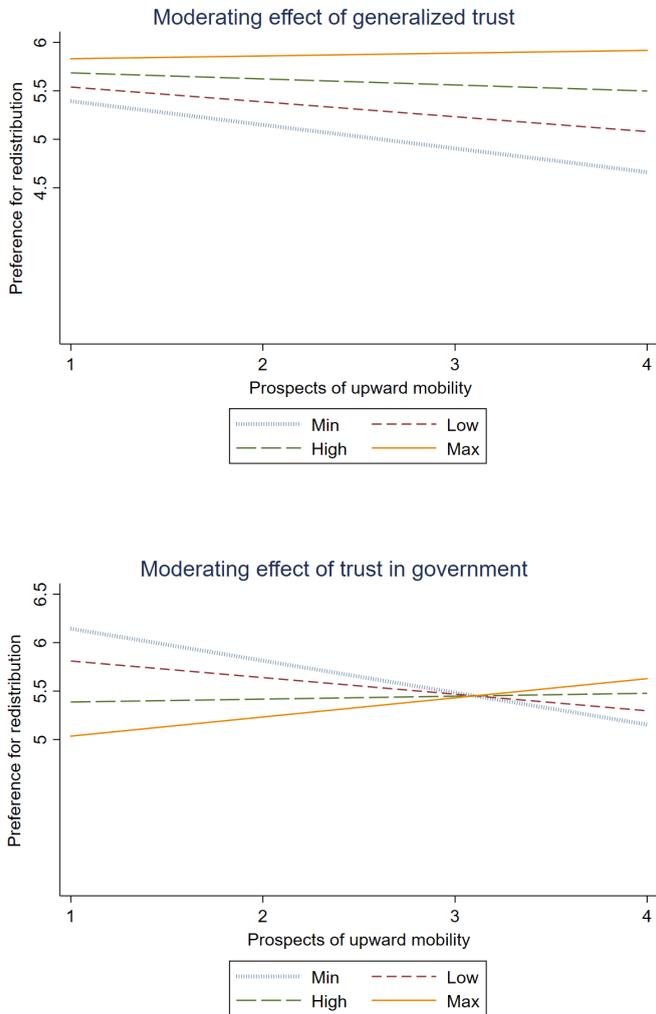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의 모델 4, 모델 5는 본인을 중산층이라 인식한 사람들의 재분배 선호에 대한 결정 모델의 회귀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하층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는 이념성향, 성별, 결혼 여부, 경제상황 만족도였으며, 각 회귀계수의 방향성은 하층과 같았다. 하층과의 차이는 중산층의 경우 국민 정체성이 두 모델에서 모두 0.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층과 달리 중산층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을 경우 재분배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미국의 경험연구와는 사뭇 다른 패턴으로 보이는데, 샤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하층으로 갈수록 국민적 정체성이 높고 그러한 높은 정체성이 재분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귀결된다고 설명되는 반면(Shayo 2009), 본 연구결과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하층의 국민적 정체성은 재분배 인식에 영향이 없으며 중산층의 경우 국민적 정체성이 강할 때 오히려 재분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의 차이, 그리고 계급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맥락적 의미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신뢰를 포함한 상호작용항의 경우,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회귀계수 β 는 0.086으로, 하층과 마찬가지로 정부신뢰가 1단위 높아질 때마다 계층이동 전망과 재분배 선호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0.086씩 조절되는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반신뢰의 조절효과에 있어 하층과 중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론적 측면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일반신뢰의 경우 복지 수혜자의 정직성에 대한 기대, 즉 복지 수혜자가 시스템에 무임승차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 주관적 계층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준거 집단과의 차이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층의 경우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같은 계층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무임승차가 걱정되면 자신의 혜택이 무임승차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로 손실될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다. 반면 중산층은 재분배로 인한 복지 혜택을 직접 받는 입장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 측면에서의 외부효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기보다는 복지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에 더 주목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은 모델 4와 모델 5에 나타난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에 따른 재분배 선호의 선형 예측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신뢰의 경우 양의 회귀계수가 보고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정

부신뢰의 조절효과는 신뢰가 낮을 때와 높을 때 각각 기울기의 부호가 변하는 교차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대로, 중산층의 경우 상향이동 인식이 높으면 미래에 본인이 소득분배의 사다리에서 상층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재분배로 인해 직접 수혜를 보지는 않지만, 분배정의의 측면에서 복지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일반신뢰(상)와 정부신뢰(하)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형예측값(중층)

<표 6>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재분배 선호의 결정모형: 상층($N=1,638$)

		Model 6		Model 7		
		<i>Coef</i>	<i>SE</i>	<i>Coef</i>	<i>SE</i>	
정치경제적 요인	계층이동 전망	-0.373	0.327	0.139*	0.068	
정치심리적 요인	이념성향	-0.264***	0.054	-0.262***	0.054	
	정부신뢰	0.088 ⁺	0.048	0.227**	0.087	
문화적 요인	공정성 인식	0.035	0.072	0.039	0.072	
	국민 정체성	0.464***	0.084	0.468***	0.084	
	일반신뢰	-0.261	0.320	0.227**	0.087	
상호작용항	계층이동 전망×일반신뢰	0.179	0.113			
	계층이동 전망×정부신뢰			0.065	0.060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19-29세)	30대	-0.253	0.174	-0.253	0.175
		40대	0.060	0.186	0.058	0.186
		50대	0.119	0.185	0.106	0.185
		60-69세	-0.122	0.197	-0.127	0.197
	성별(남)	0.075	0.998	0.071	0.100	
	결혼 여부(기혼)	0.234 ⁺	0.137	0.232 ⁺	0.137	
	경제상황 만족도	0.168***	0.025	0.169***	0.025	
	고용상태 (비고용)	상용직	0.380**	0.123	0.374**	0.123
		임시일용직	0.611**	0.209	0.594**	0.209
		자영업	0.099	0.153	0.094	0.153
무급가족종사		0.106	0.290	0.109	0.291	
R^2		0.136		0.136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마지막으로 <표 6>은 본인이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재분배 선호에 대한 결정모형을 다룬다. POUM 가설에서도 상층의 경우는 계층상승 전망과 재분배 정책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의 실질적 함의는 불명확하다. 마찬가지로 신뢰 각각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고용에 비해 상용직의 직업지위를 가지는 경우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높는데, 이는 직업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높은 자산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분배로 인한 세

올에도 관대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사회적 요인 외의 설명요인들 중에서 상층의 재분배 선호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중산층과 유사하다. 국민 정체성은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재분배 선호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하층과 중층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재분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상층에서는 성별은 재분배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보수성과 기혼 여부는 계층과 상관없이 여전히 상층에서도 재분배 선호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은 계층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예비적 분석과 본 분석에서 모두 드러나듯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은 하층에서 가장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심리적 변수와 문화적 변수의 경우 중산층과 상층에서는 국민 정체성이 재분배 선호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하층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층에 있어 임금근로자의 직업 지위는 비고용에 비해서 재분배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으나 중층과 하층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성별은 하층과 중층에서 각각 남성이 여성보다 재분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상층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계층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은 정치이념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였으며 회귀계수의 상관관계 부호는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였다. 정치이념은 진보적이라 응답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높고, 보수적이라고 응답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낮은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연령이 통제되어도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더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만족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하층의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은 정치심리적 요인으로서의 정부신뢰와 문화적 요인으로서의 일반신뢰와 상호작용하여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 중 하나인, 왜 불평등 구조하에서의 상대적 약자 집단이 재분배에 반대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 사회적 선호를 자기이해(self-interest)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저소득층의 낮은 재분배 선호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바는, 설령 현재소득이 낮 으면서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재분배 정책의 수혜자인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와 재분배 정책의 집행자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재분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합리적 의사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심리적이며 문화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토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는,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의 설명요인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결과의 불평등과 사회의 기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각종 재분배 정책과 이념에 대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객관적 계층구조의 사다리에서 소외된 집단이 어찌서 재분배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지는 정치태도와 인식에 대한 다양한 저변의 연구 흐름에서도 중요한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분배 선호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변인, 정치심리적 변인, 문화적 변인, 사회인구적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층별 재분배 선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재분배 선호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기이해를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접근방법과 사람들의 믿음과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변인들을 강조하는 최근의 접근방법이 영향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그간의 이론적 설명에 대한 기계적 적용을 넘어서, 서로 다른 변인들 간에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베너부와 옥(2001)의 POUM 가설에서 출발하여, 계층이동의 전망과 정부신뢰와 일반신뢰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POUM 가설에 대한 실증적 설명력을 논의하였다.

상기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2019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두 종류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계층과 계층상승 전망 간의 상호작용 모델을 실시하여, 현재 하위계층 이더라도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인식하면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철회한다는 POUM 가설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하층과 중층, 상층 각 계층별로 재분배 선호와 관련 있는 변인들을 판별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하층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 즉 계층이동 가능성이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통해 재분배 선호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층은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POUM 가설에 따라 자기이해에 기반을 한 정책선호를 보이지만, 재분배 선호의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는 정부기능과 동료 시민에 대한 믿음이나 판단에 의해 조절된다. 둘째, 중층은 일반신뢰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나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는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 수혜자보다 공급자의 기능에 더 주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정치이념과 경제상황 만족도는 계층과 관계없이 재분배 선호와 일관된 관계를 보이는 반면, 고용상태와, 국민정체성, 일반신뢰, 정부신뢰와 같은 변인들은 계층과 상호작용항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는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와 관련된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했지만 한계점 또한 있다.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에 대한 맥락적 요인으로 신뢰 변수를 고려하였으나, 이것이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 배경하에서 계층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못했다. 나아가 본 논문의 분석대상과 모델은 국제적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각각의 변인들의 효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한계상 그러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가 개인의 경제적 동기인 자기이해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의 정직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복합적인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범시민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동료시민에 대한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세. 2019. “비교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의 3 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재분배 선호.” 《아시아리뷰》 9(1): 289-315.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

(3): 5-28.

- 강정희·염동문. 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0(2): 319-351.
- 김동훈·하상웅. 2020. “소득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주관적 계층 상승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28(1): 49-85.
-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문우진. 2017. “한국에서의 소득기반 투표의 비활성화.” 《한국정치학회보》 51(4): 101-122.
- 서복경·한영빈. 2014. “계층 인식이 정책 선호 및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계층거리감’ 변수의 적실성 검토”. 이갑윤·이현우. 2014. 《한국의 정치 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오름.
- 신현중·주재현·박치성. 2019. “소득재분배 선호도 결정요인의 다수준 분석-문화변수의 설명력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3): 157-188.
- 신화용·안도경·박원호. 2015. “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이슈의 지역화와 정책선호에 관한 실험설문.” 《한국정치학회보》 49(4): 301-333.
- 양종민. 2020.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79-112.
- 이지은·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359-390.
- 이재완. 2017. “사회복지 자원봉사 참여와 계층상승 가능성: POUM 가설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139-165.
- 이현우. 2013.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복지국가 유형과 정부의 질, 자기이익.” 《국제정치논총》 53(2): 249-280.
- 장승진. 2013.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 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7(4): 51-70.
- 최창용·최슬기. 2018. “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정부학연구》 24(1): 157-191.
- 하슬잎·이우진. 2016.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9(4): 119-165.

Alesina, Alberto and George-Marios Angeletos. 2005. “Fairne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960-980.

Alesina, Alberto and Eliana La Ferrara. 2005.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3(3): 762-800.

Alesina, Alberto and Paola Giuliano. 2011.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Handbook*

- of Social Economics*. Vol. 1. North-Holland. 93-131.
- Alesina, Alberto and Paola Giuliano. 2015. "Culture and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3(4): 898-944.
- Benabou, Roland and Efe A. Ok.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 Benabou, Roland. 2008. "Ideolog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6(2-3): 321-352.
- Bergh, Andreas and Christian Bjørnskov. 2011. "Historical Trust Levels Predict the Current Size of the Welfare State." *Kyklos* 64(1): 1-19.
- Boix, C.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oks, Clem and Jeff Manza. 2006.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The Journal of Politics* 68(4): 816-827.
- Buscha, Franz. 2012. "Financial Expectations and the 'Left-right' political Value Scale: Testing for the POUM Hypothesis." *Economics Letters* 115(3): 460-464.
- Charron, Nicholas, Niklas Haring, and Victor Lapuente. 2021. "Trust,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 Why Some Governments Overregulate and Under-redistribute." *Regulation & Governance* 15(1): 3-16.
- Checchi, Daniele and Antonio Filippin. 2004.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POUM Hypothesis*.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Daniele, Gianmarco and Benny Geys. 2015. "Interpersonal Trust and Welfare State Suppor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9: 1-12.
- Easton, David.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435-457.
- Edlund, Jonas.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370.
- Engelhardt, Carina and Andreas Wagener. 2014.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Discussion Paper* No. 526.
- Fehr, Ernst and Klaus M. Schmidt. 2006. "The Economics of Fairness, Reciprocity and Altruism—experimental Evidence and New Theorie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1: 615-691.
- Hetherington, M.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irschman, Albert O. and Michael Rothschild. 1973. "The Changing Tolerance for

-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a Mathematical Appendix.”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4): 544-566.
- Inglehart, Ronald. 1999. “Postmodernization, Authority and Democracy.” in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ime-Castillo, Antonio M. and Ildefonso Marqués-Perales. 2019. “Social Mobility and Demand for Redistribution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0(1): 138-165.
- Jackman, Mary R. and Robert W. Jackman. 2020.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nsen, Carsten and Gert Tinggaard Svendsen. 2011. “Giving Money to Strangers: European Welfare States and Social Trus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 3-9.
- Kluegel, James R. and Eliot R. Smith. 2017.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Routledge.
- Korpi, Walter.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Lipset, Seymour. Martin, P.F. Lazarsfeld, A.H. Barton, and J. Linz. 1954. “The Psychology of Voting: An Analysis of Political Behavio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1124-1175.
- Lipset, Seymour Martin and William Schneider. 1987. “The Confidence Gap during the Reagan Years, 1981-1987.”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2(1): 1-23.
- Lupu, Noam and Jonas Pontusson. 2011.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2): 316-336.
- Luttig, Matthew. 2013.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Americans’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7(3): 811-821.
- Meltzer, Allan H. and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 Miller, Arthur H., and Ola Listhaug. 1990. “Political Partie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 Comparison of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3): 357-386.
- Nagayoshi, Kikuko and Yoshimichi Sato. 2014. “Who Supports Redistributive Policies in Contemporary Japan? An Integrative Approach to Self-interest and Trust Models.” *International Sociology* 29(4): 302-323.
- Newton, Kenneth.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Norris, Pippa. 2000. *Making Democracies Work: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in 47 Societies*.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Science Foundation URESO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t the University of Exeter, UK.
- Piketty, Thomas. 1995. "Social Mobility and Redistributive Politic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551-584.
- Ravallion, Martin and Michael Lokshin. 2000. "Who Wants to Redistribute?: The Tunnel Effect in 1990s Russi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1): 87-104.
- Rehm, Philipp. 2016. *Risk Inequality and Welfare States: Social Policy Preferences, Development, and Dyna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eda, David. 2018. "Food Comes First, then Morals: Redistribution Preferences, Parochial Altruism, and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The Journal of Politics* 80(1): 225-239.
- Sears, David. O., R.R. Lau, T.R. Tyler, and H.M. Allen. 1980. "Self-interest vs. Symbolic Politics in Policy Attitudes and Presidential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670-684.
- Shayo, Moses. 2009. "A Model of Social Identity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Economy: Nation, Cla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2): 147-174.
- Yamagishi, Toshio, and Midori Yamagishi.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접수 2021.11.04.; 수정 2021.12.11; 게재확정 2022.01.11>

Mobility Optimism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POUM Hypothesi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Duhu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ffect of Koreans' mobility optimism on redistribution preference var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generalized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The applicability of the prospects of upward mobility (POUM) hypothesis to Korean society was critically reviewed. The POUM hypothesis explains that people's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may change depending on their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a future class upturn when belonging to the same clas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19 Korean Social Integration Survey (KSIS) data. In the analysis results, a model that excluded trust variables supported the POUM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POUM in the lower class, the more negative the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However, in the second model that included the trust variables, when generalized trust and government trust were high among people belonging to the lower and middle classes, negative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did not appear when the POUM was hig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ason the lower class maintains a conservative policy attitude is not only based on economic judgment on the ladder of class mobility but also that self-interest, the primary motive for determining redistribution preference, is moderated by beliefs and judgments about government functions and fellow citizens.

Key words: class, prospects of upward mobility, redistribution preference, POUM hypothesis, generalized trust, trust in government

<부록>

<표 7> 기관신뢰의 요인별 구성요소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 > 0.4)			
요인 1: 정부신뢰		요인 2: 민간기관 신뢰	
정부부처	0.4490	노조	0.5488
국회	0.5153	시민단체	0.6109
법원	0.7958	TV방송사	0.6080
검찰	0.7816	신문사	0.5731
경찰	0.6256	교육기관	0.6254
		의료기관	0.6150
		대기업	0.5529
		종교기관	0.6173
		금융기관	0.6907

<표 8> 기관신뢰 요인별 고유값과 설명력

요인	고유값 (eigenvalue)	비율	누적 비율
1	5.414	0.604	0.604
2	1.175	0.131	0.735
3	0.674	0.075	0.810
4	0.564	0.063	0.873
5	0.344	0.038	0.911
6	0.280	0.031	0.943
7	0.163	0.018	0.961
8	0.153	0.017	0.978
9	0.112	0.012	0.990
10	0.049	0.006	0.996
11	0.193	0.002	0.998
12	0.012	0.001	0.999
13	0.003	0.000	1.000
14	0.000	0.000	1.000

<표 9> 객관적 사회경제지위(계층)별 재분배 선호의 결정모형¹⁾²⁾³⁾

		Model 1(Lower)		Model 2(Lower)		Model 3(Middle)		Model 4(Middle)		Model 5(Upper)		Model 6(Upper)		
		<i>Cbe</i>	<i>f</i>	<i>SE</i>	<i>Cbe</i>	<i>f</i>	<i>SE</i>	<i>Cbe</i>	<i>f</i>	<i>SE</i>	<i>Cbe</i>	<i>f</i>	<i>SE</i>	
정치경제적 요인	계층이동 전망	-0.657*	0.301	0.084	0.068	-0.343	0.210	0.019	0.048	-1.292**	0.384	-0.080	0.097	
	이념성향	-0.247***	0.055	-0.243***	0.055	-0.235***	0.039	-0.233***	0.038	-0.174*	0.077	-0.179	0.077	
정치심리적 요인	정부신뢰	-0.200	0.052	-0.347+	0.180	-0.019	0.033	-0.478***	0.113	-0.080	0.067	0.276	0.234	
	공정성 인식	-0.086	0.075	-0.095	0.075	0.050	0.050	0.044	0.050	-0.053	0.098	-0.047	0.098	
문화적 요인	국민 정체성	0.167*	0.074	0.161*	0.074	0.436***	0.055	0.445***	0.055	0.849***	0.116	0.833***	0.116	
	일반신뢰	-0.307	0.280	0.372***	0.081	-0.074	0.194	0.251***	0.057	-0.593	0.037	0.572***	0.112	
상호작용항	계층이동 전망×일반신뢰	0.275*	0.110			0.131+	0.075			0.445**	0.137			
	계층이동 전망×정부신뢰			0.127+	0.068			0.175***	0.041			-0.126	0.083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30대)	40대	0.346+	0.198	0.330+	0.198	0.162+	0.083	0.163+	0.083	0.222	0.169	0.213	0.170
		50대	0.236	0.184	0.228	0.184	0.123	0.089	0.115	0.088	0.210	0.186	0.199	0.187
		60-69세	-0.150	0.181	-0.167	0.181	0.003	0.114	-0.011	0.114	0.042	0.322	0.080	0.323
	성별(남)	0.396***	0.104	0.398***	0.104	0.230**	0.072	0.225**	0.072	0.147	0.144	0.166	0.144	
	결혼 여부(기혼)	0.314**	0.104	0.321**	0.105	0.128	0.089	0.133	0.088	0.254	0.224	0.254	0.225	
	경제상황 만족도	0.175***	0.257	0.173***	0.258	0.145***	0.018	-0.233***	0.039	0.212***	0.037	0.216***	0.037	
	상용직	0.175	0.147	0.168	0.147	0.043	0.093	0.045	0.092	-0.041	0.229	-0.014	0.230	
	고용상태 (비고용)	임시일용직	-0.003	0.149	-0.004	0.149	-0.058	0.142	-0.071	0.142	-0.084	0.411	-0.078	0.413
		자영업	-0.032	0.128	-0.044	0.128	0.071	0.104	0.078	0.104	-0.227	0.265	-0.200	0.266
	무급가족종사	-0.242	0.187	-0.239	0.187	-0.139	0.201	-0.122	0.201	0.328	0.922	0.292	0.926	
R^2		0.104		0.102		0.090		0.094		0.192		0.184		
N		1,877				3,644				937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 1)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상층은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며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하층은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이며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중층은 나머지의 경우로 코딩하였다.
이는 각각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의 분포 수준을 고려했으며,
주관적 계층에 비해서 중산층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안배하여 결정하였다.
 - 2) 객관적 교육수준이 계층분류 과정에 포함되었는데,
이때 20대 이하의 교육과정이 끝나지 않아 교육수준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8~29세 연령집단 1,542명은 해당 분석에서 제외하고 6,458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객관적 모델과 주관적 모델 간에 핵심 변인들 중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객관적 모델에서만 상층의 일반신뢰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며,
다른 상호작용항의 방향성과 유의성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